

## 연구윤리 규정

관리번호	7-5
------	-----

제정 2008. 05. 23.      개정 2009. 04. 27.  
 개정 2009. 09. 28.      개정 2011. 11. 20.  
 개정 2015. 03. 01.      개정 2015. 10. 06.  
 전문 2016. 03. 24.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천대학교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라 함은 부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또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4.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5.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규정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 ② 본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연구 활동과 정부기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을 적용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자 및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8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9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

- 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대학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대학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연구지원부서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창구는 연구지원부서에서 관장한다.
- ② 연구지원부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내용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증거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연구부정행위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총장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할 의무를 진다.
- ⑥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 등의 인지로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총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연구지원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제보내용이 제12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및 5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의 사용여부

- ③ 제2항 제3호의 시효기산일은 해당 부정행위 관련 연구내용 및 결과를 논문으로 게재한 날,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한 날 중에서 최근의 일자로 한다.
-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총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

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판정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단계로 임의로 번복할 수 없다.
-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한다.

- ②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구성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총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총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8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총장은 이 규정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총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

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검증 비용)**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대학교가 부담하며, 조사위원에게는 자료 수집비, 회의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제6조④항, 제14조②항, 제20조①항, ②항, 제24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종전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연구윤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3]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의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 I. 제보 개요

- 1. 제보자(익명일 경우 익명으로 표시):
- 2. 제보일시:
- 3. 제보방법:
- 4. 제보내용:

#### II. 연구부정행위 유형 : 조사 대상의 연구부정행위 유형과 세부내용

#### III. 본조사 실시 여부 : 본조사 실시(미실시) 여부 및 그 이유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4]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보고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제보하였는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
2. 조사 대상이 된 연구과제 및 연구부정행위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위반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관련자 신원정보
5. 조사결과 및 결론

본조사위원회가 해당논문, 피조사자의 답변서, 피조사자의 진술, 기타 관련 증거물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귀하